

내년 예산안 '밑빠진 독에 물붓기'

유성엽, 기재부 안일한 대처
SOC 올해도 유일 감액
정책 방향 수정 없어
국회 심의과정서 조정해야



따르면, 전체 예산은 470.5조원으로 작년 분예산 428.8조원 대비 9.7%나 증가했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큰 증가폭이자 내년 성장성장률 예상치인 4.4%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의 재정확대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 수정 없이 재정만 투입한다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먼저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7.6조원 증가한 162.2조원으로 책정, 전체의 3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야별 최대 증액이며, 특히 일자리 예산 23.5조원은 지난해 대비 22%나 상승했다. 2년에 걸쳐 일자리에만 54조원을 투입한 것에 이어 3년만에 총 80조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 붓겠다는 이야기다.

상대적으로 매우 큰 감소폭이다. 또한, 예산 전 분야 중 유일하게 감액된 분야로서 정부가 성장을 통한 경기 활성화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유 의원은 "지금 경제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치달고 있는데도, 기재부의 이번 예산안을 보면 복지는 늘리고 SOC는 줄인다는 작년 예산기조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는 결국 현재의 위기에 대한 대처는 전혀 없이, 지금 우리 경제가 잘 가고 있다는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위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안일한 대처라는 지적이 나왔다.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사진)은 28일 오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과 관련, "고용소극에 물가상승, 성장을 하라까지 온 경제가 비상인데, 기재부는 전년도 예산기조 그대로 단순히 퍼주기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기재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그러나 이 같은 초 확장재정정책은 단기적 역할을 할 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지금의 경제위기가 외부의 일시적 충격이 아닌, 산업구조 전반과 잘못된 경제 패러다임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이에

이에 반해 기재부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투자하겠다고 한 SOC 예산은 전년도 14.2% 감액된 것에 이어 올해에도 2.3% 감액된 18.5조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전체 예산이 10% 가까이 증액된 것을 감안하면

470조 슈퍼예산 편성 나랏돈 어디에 쓰나

올해보다 9.7% 늘어
10년 만에 최대 증가율
일자리예산 22.0% 급증

내년 정부예산이 470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7% 늘어난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듬해인 2009년(10.7%) 이후 10년 만에 최대의 증가율이다. 늘어나는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 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들 삶의 질 개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7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증액됐다. 한부모 가족·보호종료 아동 등 소외계층 지원이 확대된다. 산업분야는 올해 16조3000억원에서 내년 18조6000억원으로 14.3% 늘어나며 최고 증가율을 시현한다. 증가율 상위 3개 분야는 산업에 이어 일반·지방행정(12.9%), 복지(12.1%) 등이다. 산업단지 환경 개선이 2000억원에서 7000억원, 혁신창업 활성화를 3조3000억원에서 3조7000억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은 2조1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최영심 의원, 내달 11일까지 도 출연기관 비정규직 간담회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사진)은 도 출연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의 의견청취와 문제점 개선을 위해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순회 간담회를 갖는다.



지역신문발전 토론회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신문 발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강호성, 김병준 비대위원장, 부산일보 안병길 대표이사, 매일신문 이상택 대표이사, 경남신문 최광주 대표이사, 대전일보 남상현 대표이사, 경인일보 김희양 대표이사, 전북일보 서창훈 대표이사, 강원일보 박진오 전무.

지난 8월 중순까지 교육행정기관 용역근로자들과 정규직 전환 간담회를 가졌던 최 의원은 27일부터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인 도 출연기관 12곳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도 출연기관 12곳의 정규직 전환 대상인원은 기간제 302명과 파견용역 112명 등 41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관들은 지난 7월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쳤으며 현재까지 2~3차례 걸쳐 해당 위원회를 열어 정규직 전환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규직 전환 인원과 범위, 전환 이후 임금체계, 전환 시점, 처우개선 및 후속조치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써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겠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김진성 기자

홍영표 "집값 진정 안되면 더 강한 규제" 경고

홍영표(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8·2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번 규제 조치가 안 될 경우 더욱 강한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시장에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과 신혼부부들이 정직한 노동을 통해 충



분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비정상에 가깝다. 자고나면 집값이 1억 오른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 작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는 주택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급등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서울경기 주택공급 규모가 연간 33만호인 것을 보면 주택 공급 부족이 문제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서울에서 집 사면 떠돌아다니는 투기 심리가 더 큰 문제다. 투기 심리가 확산되면 서민 실수요

자의 불안 심리는 더욱 커진다"며 "정부가 투기 심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집값 안정은 서민을 위해 꼭 달성해야 할 목표다"라고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 발표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두 자릿수 가까운 규모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과감한 재정확대로 경제 역동성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더욱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과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9.7% 확대된 470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09년을 제외하고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경상성장률 전망(4.4%)의 두 배가 넘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총지출증가율이 9.7%이지만 경제위기 때와 같은 위기상황은 아니라는 게 정부 판단"이라며 "우리 경제는 경제위기 때 정도의 위기는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총수입은 481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6% 늘어났다. 국제수입은 반도체·금융 업종 등 법인의 실적 개선,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11.6%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출 확대에도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39.4%로 올해(39.5%)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분야별 복지는 162조2000억원으로 올해 144조6000억원보다 17조6000억원(12.1%) 확대된다. 이는 금액 기준 최대 증가치이며 총지출 대비 비중은 올해(33.7%)보다 0.8%포인트 늘어난 34.5%에 달한다.

청년실업 문제 등 문재인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자리 분야의 예산은 올해 19조2000억원에서 23조5000억원으로 22.0% 증가한다. 기초연금은 9조1000억원에서 11조5000억원으로 늘고 아동수당도

문화·체육·관광은 올해 6.3% 줄었으나 내년에서 10.1% 늘어 7조1000억원으로 반등한다. 환경 분야도 올해 0.3% 감소했으나 내년에 3.6% 확대돼 7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이는 지역밀착형 생활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에 따른 것이다.

국방예산도 올해 43조2000억원에서 내년 46조7000억원으로 8.2% 늘어난다. '국방개혁 2.0'을 뒷받침하고 군정병 주거여건과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내년에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선다. 기초연구, 미래원천기술, 생활밀착형 R&D 투자 중심으로 확대된 것이다.

농림 분야 예산도 올해 19조7000억원에서 19조9000억원으로 소폭 확대된다. 변동비불금 자연감소분 5000억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7000억원이 늘어나는 규모다.

반면 SOC 예산은 줄어든다. 올해 19조원에서 내년 18조5000억원으로 2.3%인 5000억원이 감소한다. 도시재생과 공공주택은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인 점을 감안해 이를 포함하면 전체 건설투자 규모는 27조에서 27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상황이 대단히 어렵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경제 여건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2019년도 예산안은 재정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뉴시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